아시아리뷰 제1권 제2호, 2011: 175~180

정재호,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의 미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 · 베이징대 초빙교수

2012년은 한중 수교 20주년이 되는 해다. 북한에서는 김정일의 사망으로 인해 그의 아들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 남한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총선과 대선이 치뤄진다. 중국에서는 근대로의 문을 활짝 연 신해혁명 백주년을 넘어 시진핑 시대가 개막한다. 사회주의 국가 중국은 과연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의 구원투수로서 세계의 공장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G2 중국은 세계의 패권국가 미국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는? 학자, 전문가, 정책연구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해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정재호 교수는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의 미래』에서 자신의 답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장점은 읽기가 쉽다는 것이다. 학자가 습관적으로 의존하는 전문용어나 학술이론을 되도록 삼가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글쓰기 방식으로 가십과 에피소드들을 활용하여 자신의 논지를 펼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시종일관 치열한 문제의식을 견지한다. 즉, 대한민국이 이미 직면했고 앞으로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관계의 딜레마, 외교의 낙후성, 시대의 변화에 뒤쳐진 안이한 고정관념 등을 날카롭게 응시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다. 읽기도 편한 만큼, 관심 있는 독자라면 누구에게나 일독을 권하고 싶다.

평자는 국제관계의 전공자가 아니다. 대한민국 외교 현장에 대한 경험은 더욱이나 일천하다. 그럼에도 나에게 서평 의뢰가 온 데에는 2010년 서울대학교에서 정년을 한 이후 2년간 베이징대학교 초빙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어 이 책의

제목인 “중국의 부상”에 관하여 현장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남한과 함께 ‘한반도’를 이루는 북한에 관해 나름의 생각이 있을 터이니, 이에 착안하여 서평을 쓰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편집진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다.

하여 그런 눈으로 책을 읽으면서 저자의 혜안과 열린 사고로부터 많은 자극을 받았다. 특히 이 책의 중심 테마인 한반도의 불확실한 미래, 즉 오늘날 눈부시게 떠오르는 중국의 권력과, 점차 기울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의 권력 사이에 끼어 있는 대한민국이 두 강국의 “수렴점”(404쪽)을 찾는 과업의 어려움과 위험, 그리고 이를 향한 저자의 고뇌 어린 관찰과 설득력 있는 제안들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공감했다.

그럼에도 내가 서평을 쓰게 된 맥락에서 보자면, 이 책은 시종일관 표면화된 국제관계의 흐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중국이 어떤 내재적 발전논리와 경로로 오늘의 G2 국가에 진입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화해갈 것인가에 대해 단편적인 언급만 있을 뿐, 중국의 부상을 설명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사회과학적인 분석이나 전망을 찾기는 어렵다. 북한에 대한 분석도 대체로 대중매체 수준의 관찰에 머물러 있다. 한 보기로, 북한의 핵개발을 정권안보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 그러나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 미국 정부의 중국을 겨냥한 동북아 안보정책 등이 북한의 핵개발 결정에 어떻게 연계되어 있으며, 사후적으로 볼 때 문제해결의 돌파구나 기회가 언제, 어떻게 유실되었는가를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더욱이 정 교수처럼 유연하고 상상력이 풍부한 학자라면, 이에 관해 흥미로운 논의나 가설을 제시할 수 있을 법도 한데, 이런 독창적 시도가 없어 아쉬웠다. 방법론적으로 보자면 이 책은 오늘의 난관이 권력주체들 간의 선택과 배제의 결과가 아니라, 1990년대 초에 일어났던 일련의 국제관계 지각변동 — 동구권 붕괴, 구소련과 중국의 대한민국과의 수교 — 의 필연적 결과인 것처럼 읽혀질 수 있어, 다소 안이한 사건의 역사적 기술이 아닌가 생각된다.

비록 주관적 기대가 충족되지는 못했지만 이것은 평자의 편견일 수 있고, 중요한 점은 이 책의 저자가 국제관계 전공자로서 단순히 머리만이 아니라 발로 현장을 뛰면서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 인터뷰를 했고, 다양한 출처에서 얻은 지식의 보고를 이 책에 알기 쉽게 담았다는 점이다. 각고의 노력과 정성, 집요한

탐구정신, 상아탑보다는 현장을 중시하는 실용주의,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신념을 갖고 뛰어드는 실천적 태도가 돋보인다. 훌륭한 책이고, 모범적인 학문적 태도다.

이 책의 핵심 주장을 빨리 간취하려는 독자는 우선 13장, "동맹과 동반자 사이에서: 한국의 전략적 선택은 무엇인가?"를 읽기 바란다. 대한민국과 중국 사이에 갈수록 증가하는 경제, 사회, 문화 교류, 그리고 미국과 반 세기 이상 맺어온 안보 동맹과 정치연합, 인적 교류 등을 고려할 때, 두 국가 모두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어느 한 쪽으로 경사되면 위험하다는 점은 명확하다. 그러나 어떤 이론과 전략으로 이 과제를 수행할 것인가? 노무현 정부가 표방했던 동북아 '균형자' 역할 또는 '균형외교'는 그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란과 오해를 가져왔다. 읽기에 따라 이 책은 보다 성숙한 균형외교를 주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자는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전략적 대안을 10가지로 논하면서 고도의 사고와 신중을 요구하는 '위험 분산'과 '현안별 지지'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념이나 특정 구조에 집착하지 않는 유연성"이 필수적이며 "이는 곧 뛰어난 외교 감각과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413쪽).

'명민외교'를 향한 저자의 외침과 열정은 설득력이 있고 감동적이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과거에 비해 악화되는 듯한 한중 관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저자의 주장은 시의적절하기도 하다. 2008년 한중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것이 명민외교의 관점에서 합리적이었던가를 따지는 14장의 논의도 새겨 볼 만하다. 그러나 명민외교를 이 책의 결론으로 주창한다면, 이를 향해 대한민국의 외교가 어떻게 시행착오를 거쳐 진화해 왔는지를 좀 더 주도면밀하게 살피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독자의 이런 시각을 해치는 인습적인 평가도 자주 등장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정책이 한미 간의 '균열'을 가져왔다는 표현이 한 보기다. 자주 등장하는 이 표현의 객관적 근거가 의문스럽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쪽에 경사되었던 외교의 축을 균형점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일이며, 저자 자신이 이 점을 역설하고 있다. 그럼에도 명민외교를 향한 지난 정부의 노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채, 한쪽을 얻으면 다른 쪽은 잃는다는 제로섬 시각을 택하면 외교 주체가 설 공간은 매우 협소해진다.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을 강조한 것은 지당하나 둘 사이의 대립을 상정한 시각에 가려

대한민국 외교의 고뇌와 진화를 주체적 입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했는지, 혹시 이념화된 대중매체의 표현과 평가를 다소 무비판적으로 차용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일이다.

이 책은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두 개의 장에서 다루고는 있으나 중심 의제는 중국과 대한민국의 관계이다. 한중 관계의 변천을 냉전기, 전환기, 탈냉전기의 시대 구분에 따라 1부, 2부, 3부에서 다루고 있다. 그러나 딱딱한 역사학적 고증의 방법론을 따른 것은 아니다. 한중 관계에 영향을 미친 여러 요인들을 추출하여 설명하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때문에 글이 무겁지 않고 독자를 열린 사고로 인도한다. 한중 관계의 변화 양상을 개관하고 싶은 독자는 이 책으로부터 흥미로운 관찰과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기저를 이루는 명제는 '성공의 의도치 않았던 딜레마'로 요약할 수 있다. 한중 관계는 1992년 8월 국교수립 이래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 성공의 이면에서 대한민국은 새로운 딜레마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 대한민국의 경제/무역의 중국 의존도는 최상위로 빠르게 증가하는데 반해, 안보/국방은 여전히 미국과의 동맹에 의존하는 데서 나오는 긴장이 문제의 근원이다. 이 긴장은 미국과 중국이 대립과 갈등의 적대 관계로 발전할 경우,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에 관해 주목할 점은 저자는 중국의 미래에 관하여 여러 모델을 언급하고 있지만, 결국 중국이 세계 패권국가가 될 개연성이 높다는 견해를 수용한다는 것이다. 미국 중심의 "국제정치 구조 및 규범의 질서에 도전하는" 국가로서 중국이 "지속적으로 부강해질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것이다(394-395쪽). 이것은 곧 미국의 압도적 패권하에 동아시아의 안보가 보장되기 힘들 것이라는 예상으로 이어진다. 미국의 세계군사전략은 최근 아시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실제로 협력과 공존이 아닌 갈등 관계로 진입한다면, 한반도의 미래는 더욱 불확실해질 것이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암암리에 전제하는 중미 갈등의 객관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 즉, 미국의 패권적 경향을 중국에 그대로 투사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중국이 패권국가로서의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아직 발전과정에 있는 중국의 사정을 감안할 때, 중국이 먼저 미국과 대항하려는 행동을 취할 개연성은 적어 보인다. 계산에 빠른 중국이 엄청난 손

해를 감수해야 하는 길을 걷지는 않을 것이다. 이 책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한반도의 미래에 미치는 위험을 강조하고 있으나 갈등 전망의 근거를 확실히 제시했는지는 의문이다. 저자는 대만 문제를 언급하면서 중미 군사갈등을 논하고 있으나, 이 문제는 이미 이 경로를 벗어났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에 관해 평자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중국이 위험관리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중국의 인상적인 경제위기 관리 실적은 중국에게 큰 자신감을 안겨준 요인이다. 세계의 지식인들이 중국을 다시 보게 된 계기이기도 하다. 이로부터 중국은 자신의 발전모델을 만드는 일에 큰 관심을 갖는다. 급격한 산업성장이 가져온 미증유의 위험들, 예컨대 환경 오염, 물 오염, 토지 오염은 말할 것도 없고 빈부 격차, 지역 격차, 사회적 불평등, 식품 오염 등 건강 문제, 부실 건축, 대형 사고의 위험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중국모델을 찾고 있는 것이다. 한 보기로, 도시개발의 이익을 건축업자나 지주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소유의 토지를 지렛대로 삼아 도시 농민이 공유하는 2007년 이래의 충칭(重慶) 개발은, 단순한 중국 서부의 개발모델이 아니라 중국이 직면한 심각한 위험, 즉 계급과 지역에 따른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새로운 실험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중국의 주된 관심은 상당한 기간 동안 내부지향적이 될 것이다. 급격한 성장과정의 의도치 않은 위험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중국이 더욱 번창할 수 있다고 믿는다. 때문에 중국은 한반도의 긴장 해소와 안정을 무엇보다 중시한다. 지속적 발전의 선결 요건은 안정에 있다고 보며, 자신의 안정을 해치는 위험에 대해 중국은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국제관계 면에서 중국이 밖을 향해 패권국가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관측은 아마도 미국의 거울 이미지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북한 관련 분석에 관하여 논평하자면, 북중 관계의 역사적 전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자료가 있고 흥미로운 관찰이 보인다. 왜 중국이 과거의 소련보다 북한에 더 가까워졌는지, 중국의 막강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왜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하는지 등에 대해 그럴듯한 설명을 제시한다. 한중수교가 북한에 미친 쇼크도 흥미롭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을 흔히 말하는 '벼랑 끝 전술'로만 이해하면, 북한의 입장에서 핵개발이 갖는 합리적 선택의 의미

를 제대로 포착하기 힘들다. 북한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는 것이 요긴하다. 북한이 표방해온 강성국가의 의미는 핵 보유로 구체화되었고 가까운 시일 안에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의 돌파구가 열리기 힘들 것으로 전망한다면, 북한의 핵무장은 곧 기정사실화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핵무장 이후의 한반도 비핵화 의제를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보장의 코스트는 더 높아지겠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은 어쩌면 이 의제를 이미 검토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투고일: 2011년 12월 17일 | 게재확정일: 2011년 12월 19일